

+ POSRI 보고서

美 대선, 소득불평등 이슈가 뜬다

한은석 수석연구원, 동향분석센터 (eshan@posri.re.kr)

[목 차]

1. 미국 대선 경선에서 주목 받는 소득불평등 이슈
2. 포용적 성장과 공유 자본주의의 부상
3. 한국의 공유 자본주의 및 포용적 성장의 현황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미국 대선 경선과정에서 심각한 미국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공유 자본주의 공약경쟁이 벌어진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직업 정치인 출신 후보들의 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중산층 이하 백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 후보는 부자 및 기업증세를 공약으로 제시
 - 민주당의 대세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1호 공약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 공유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
 - 한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위협했던 버니 샌더스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소득불평등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약들을 제시
- 미국 대선 경선과정에서 소득불평등 이슈 해결을 위해 제시된 공약들이 거시적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미시적으로는 공유 자본주의와 연결
 -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 G20과 OECD, IMF 등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루어짐
 - 최근 IMF는 소득불평등에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발표
 - 즉, 상위 20%의 소득 1%증가는 GDP증가율 0.08% 감소, 하위 20%의 소득 1%증가는 GDP증가율 0.38%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짐
- 공유 자본주의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유연성 확보 등의 장점 때문에 다수의 기업에서 채택, 유럽보다 미국에서 널리 보급되어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은 2014년 기준, 민간 부문 근로자의 20%가 자사주식보유제도(유럽은 10% 미만), 7%는 스톡옵션, 1/3이 이익공유제, 1/4이 성과공유제 혜택을 받음
 - 공유자본주의 제도는 생산성 증가(약 4.5%) 외에, 기업이윤의 변동성을 반영한 임금체제로 제도화되어, 기업경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 보유
- 한국은 지난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돼, 이익공유제 대신 성과공유제를 채택, 대표적 공유 자본주의 제도(Shared Capitalism Plan)로 확산
 - 2012년 6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자율협약'이 체결되고 지난 4월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협약'이 체결되는 등 확산 지속
- 최근 한국도 소득불평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목표로 제시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
 - OECD 평균(0.314)을 초과하는 지니 계수(0.37)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급락으로 드러난 소득불평등 심화로 포용적 성장이 장차 정책/공약에 반영될 전망
 - 지난 11월 20일 2015년 APEC 정상선언문에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APEC질적 성장강화 전략'이 채택
 - 포용적 성장은 거시 정책 외에 미시적 산업정책 및 공유 자본주의 제도로 이어져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생태계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

1. 미국 대선 경선에서 주목 받는 소득불평등 이슈

□ 1년도 채 남지 않은 2016년 미국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소득불평등’ 이슈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직업 정치인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나 벤 카슨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중 1위를 하는 현상은 미국 정치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
 - 기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¹이 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직업 정치인들보다 트럼프나 카슨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비직업 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이면에는 미국 정치시스템의 문제와 함께 미국 사회의 극심한 소득불평등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
 - 실제로 트럼프의 공약은 부자 및 기업 증세와 보호무역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폴 크루그먼 교수가 트럼프의 공약만은 옹호한다고 할 정도²
- 한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의 제1호 공약은 이익공유제인데 이 역시 소득불평등 이슈와 연계
 - 지난 7월 16일 뉴햄프셔주 도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이익공유제’ 확대를 제안
 - 구체적으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이익의 15%에 대해 2년 동안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
- 한때 민주당의 ‘대세’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했던 버니 샌더스 후보의 영향으로 힐러리 후보의 공약이 좀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됨
 - 미국 정치분석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힐러리보다 샌더스가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한 클린턴 캠프에서는 민주당 1차 대선주자 토론에서 임금인상, 유급 육아휴가, 부자 증세 등의 진보적 공약들을 쏟아냈음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TPP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평가
- 장차 대선 본선에 나갈 양당의 후보가 결정되면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겠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은 일관적인 흐름을 보임

¹ 미국 정치분석 사이트 Real Clear Politics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의 50% 이상이 고졸 이하 학력이고 1/3 이상이 연간 소득 5만 달러 미만임

² Paul Krugman, "Trump is Right on Economics",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7, 2015

□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의 공통적 부분은 공유 자본주의(Shared Capitalism)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는 점

- 클린턴 후보의 대선캠페인은 중산층 소득 증대에 초점을 두고,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심해진 소득불평등 문제를 주요 이슈화
 - 힐러리의 정책노선은 미국진보센터에서 발표한 ‘포용적 번영에 대한 보고서’에 기초, 이는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주도³
 - 힐러리 후보의 이익공유제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경영성과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유 자본주의’ 정책에 해당되며, 포용적 성장과도 연결
-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후보도 ‘최저임금 인상’과 ‘여성 노동자 임금 평등화’와 같은 소득불평등 이슈에 초점
 - 샌더스 후보는 Wall Street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받는 힐러리 후보보다 더 강력한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움[아래 표 참조]
 - 샌더스 후보와 힐러리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강화, 세제 개혁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소득불평등 이슈와 연관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주요 공약 비교>

	힐러리	샌더스
공유 자본주의 관련	이익공유 기업 세액공제, 최저 임금 인상 등 중산층 재건 및 소득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 노동자 협동 조합 창설, 여성노동자 임금의 평등화(남녀 임금격차 해소)
기타 공약	일자리 창출 (여성 노동력 참여 장려), 분기 자본주의 지양, 월스트리트 개혁(규제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조합 강화, 실효세제 개혁,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재건 (일자리 창출), 무상 대학교육 실시

자료: 프레시안, “미국의 불평등, 샌더스가 답이다!” (2015.9.14일자)

- 소득불평등 이슈 해결을 위해 제시된 공약들이 거시적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미시적으로는 공유 자본주의와 연결

3 로렌스 서머스 교수는 ‘포용적 자본주의’를 주창한 대표적인 인물로, 중산층 붕괴는 기업의 이익 창출 기회를 감소시켜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2. 포용적 성장과 공유 자본주의의 재부상

(1)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 포용적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성장론에 대한 반성과 연결

-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불평등 해소, 분배의 형평성 제고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
 -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성장론이 미국경제의 버블 팽창과 붕괴를 유발, 전 세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 소득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론도 근본적으로 親 성장주의
-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인 ‘부채주도 성장’ 및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가 노정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부상한 게 포용적 성장 모델
 -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이 결국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불평등 심화로 나타나 성장모델로서의 유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
 -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고용주도 성장⁴, 임금주도 성장⁵,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⁶ 모델임

□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소득불평등 문제가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

- 1980년대부터 유행한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의 논리인 ‘낙수효과’가 허구로 드러나고,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됨
 - 지난 25년 간 소득 상위10%와 하위10%의 소득차이가 7배에서 9배로 증가
 - 지난 십 년 동안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체되거나 감소(미국의 경우)하면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급증
 - 소득불평등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최소한 이전과는 다른 경제발전/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는 Consensus가 이뤄진 것

4 고용 주도 성장은 교육훈련 강화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비롯,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

5 임금 주도 성장은 단체 교섭의 적용범위 확대 및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연동을 통한 생산성-임금 협약을 강조

6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최저선 설정과 영세자영업자의 영업보호 및 소득증진을 추구하며, 사회 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정책을 강조

- G20 국가지도자들부터 IMF, OECD까지 모두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소득불평등을 우려하며, 포용적 성장을 최우선순위 의제로 다룸
 - 특히, 유럽연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10년 EURO2020을 제안, ‘스마트하고 지속적이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유럽전략을 채택’⁷
 - 중국도 2010년 8월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후, 2011년 중국 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을 강조
 - 2013년 9월에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의장국으로서 모든 국가에 공통목표로 포용적 성장의 보장을 제안하기도 함
- OECD는 다차원적 생활수준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회원국들이 심각해지는데 ‘불평등’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런 다면적 생활수준 측정단위의 제정은 기존의 소득 수준뿐 아니라 건강, 교육 등 비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합의는 불평등과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고 있음

- 충격적인 것은 IMF가 밝힌 연구결과⁸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증가와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가 GDP증가율에 상반되는 영향을 준다는 결과
 - 즉,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이 0.08% 감소한 반면,
 -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이 0.38%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
- 소위 워싱턴 콘센서스로 불린 신자유주의 경제성장론은 개별 국가가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면서 GDP가 급성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
 - 그러나 이는 정부로 하여금 국내총생산의 증가에만 초점을 두는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 결국 산업별, 소득수준별 불균형을 초래
 - 즉, 개별 국가경제의 구조적·제도적 특성을 무시한 성장정책이 실행되면서 결국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성장결과를 초래

7 지식과 혁신에 기초한 스마트성장,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제·사회·지역적 통합을 위한 ‘높은 고용(High Employment)’의 포용적 성장을 지향

8 Era Dabla-Norris, et 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 (June 2015)

(2) 공유 자본주의 (Shared Capitalism)

□ 공유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임금 또는 부를 기업과 조직의 성과에 연계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체계를 지칭⁹

- 공유 자본주의는 원래 영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근로자에게 자본의 성과를 공유하는 게 기본 취지이며, 다양한 형태로 실행 중
 - 대표적 유형으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성과공유제(Gain Sharing), 자사주식소유(Employee Ownership),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이 있음[참고1]
 - 이 중에서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노동자가 기업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 이들 보상체계의 공통점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노동자에게 이윤 또는 추가상승의 이익을 공유하게 해 주는 그룹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점

[참고1] 대표적인 공유 자본주의 제도(Shared Capitalism Plan, 이하 SCP)들

-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때 정해진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 연말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 또는 주기적으로 퇴직기금에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함
 - 성과공유제는 특정 프로젝트나 작업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 등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유하는 방식
- 자사주 소유(Employee Ownership)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노동자가 개인 자금의 투입 없이 자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이 다수를 차지
 - ESOP는 기업이 신탁기금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해 주거나 자금을 빌려와서 주식을 보유하게 해주고, 이익이 발생하면 기업이윤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
- 스톡옵션은 이익공유제와 자사주 소유의 혼합형으로, 옵션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가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 노동자는 가격 하락 시의 손실위험 없이, 주식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이익을 얻게 됨

9 Freeman, R. B., J. R. Blasi, and D. L. Kruse, "Shared Capitalism at work", NBER (2010) p4

□ 공유 자본주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보완적¹⁰ 경제 패러다임

- 미국 공유자본주의의 효시는 18세기 말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명자인 앨버트 갈라탱(Albert Gallatin)의 이익공유제까지 거슬러 올라감¹¹
 - 19세기에는 이익공유제와 자사주소유 제도가 자본주의의 발달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맞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역할 담당
 - 1920년대의 ‘복지 자본주의’를 위한 Grand Plan에 이익공유제가 포함됐고,, 1930년대에는 Arthur Vandenberg 공화당 상원의원이 의회청문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음
 -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호황기를 거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금은 정체되기 시작했고, 이익공유 개념은 공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됨
-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공유 자본주의 Project’¹²에 참여한 경제 학자들은 지금이 미국의 공유자본주의를 다시 부활시킬 때라고 주장¹³
 - 블라지(J.R. Blasi) 등은 공유 자본주의가 유럽보다 미국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기에, 미국이 공유자본주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은 2010년 기준 노동자의 10% 미만이 자사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익공유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비중도 30% 미만(스웨덴은 예외)
 - 미국은 2014년 기준 민간 부문 근로자의 20%가 자사주식보유제도, 7%는 스톡옵션, 1/3 정도가 이익공유제, 1/4 정도가 성과공유제의 혜택을 받음
- 블라지 등은 공유자본주의가 소득불평등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포용적 자본주의’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

□ 공유 자본주의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영 상 유연성 확보 등의 이유로 다수의 기업이 채택해 온 것¹⁴

10 공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의 자본이익 공유를 통한 노동자의 동기부여 강화 및 일자리 안정(그로 인한 생산성 제고) 등을 추구

11 토마스 제퍼슨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갈라탱은 1795년 Pennsylvania Glass Works에 이익공유제를 도입

12 NBER의 공유자본주의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주8]에서 언급한, 블라지, 프리먼, 크루제 공저인 “Shared Capitalism at Work”, (2010)이라는 책으로 묶여져 나옴

13 Blasi, J.R., R.B. Freeman, and D.L. Kruse, “Capitalism for the Rest of Us”, NY Times (July 15, 2015)

14 Kruse, D.L., J.R. Blasi and R. Park, “Shared Capitalism in the US Economy?..”, NBER (2008) 참조

- 공유 자본주의에 대해 기존의 경제학계에서는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위험기피자인 노동자의 소득변동성 문제를 지적
 -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s Problem)는 그룹(또는 기업 전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성과/노력과 보상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생김
 - 소득 변동성 문제는 위험기피적인 노동자가 기업성과에 연계된 소득의 변동성을 싫어하기에 위험부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공유 자본주의 제도(Shared Capitalism Plan)를 실행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생산성 향상 때문임
 -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SCP를 채택한 기업의 사례는 매우 많은데,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한 우려와 달리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SCP를 운영¹⁵
 -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SCP와 기업 성과 간 (+)의 연관성이 발견됐는데, 평균적으로 SCP 도입으로 생산성이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옴¹⁶
- 둘째로, 유연성(Flexibility)을 이유로 SCP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음
 - 유연성이 기업들의 SCP 도입 이유였다고 보는 것은 이윤의 변동성 추이로 SCP의 도입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때문¹⁷
 - 즉, SCP를 도입하면, 기업의 성과에 따라 전체 인건비의 변동이 자동적으로 발생해, 이윤(Net Profit)의 변동성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생김
 - 치열한 인재확보 경쟁에 처한 기업들이 우수인재의 이직방지를 위해 임금을 올려줘야만 하는 재무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작용
- 그 밖에도 세금공제 혜택, 노동조합 결성 방지 그리고 1980년대에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유 자본주의 체도를 도입
 - 자사주보유플랜의 경우 1980년대에 상당한 절세혜택이 주어졌고 은퇴한 주주가 자사주보유플랜에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감면 폭이 컸음
 - 노조결성과 공유자본주의 도입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온 바 있음(Freeman and Kleiner, 1990; Mitchell et al, 1990 등)
 - 1980년대에 적대적 합병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소유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도 있음(Blasi and Kruse, 1991))

15 Gregg and Machin(1988), Poole(1989), Kruse(1996) 등 다수의 논문에 관련 내용이 나옴;

16 Kruse and Blasi (1997)와 Kruse (2002) 참조

17 Kruse (1996) 참조

3. 한국의 공유자본주의 및 포용적 성장의 현황

□ 지난 정부에서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익공유제 대신, 성과공유제를 채택, 그 후 대표적 공유 자본주의 제도로 확산 중

○ 지난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 실시를 시도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끈 바 있음

- 2010년 12월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에 취임한 후 초과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밀어 부치려다가 재계와 정부의 반발에 직면

- 결국, 2012년 2월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고, 성과공유제와 둘 중에서 하나를 기업 자율로 선택할 수 있게 함

- 당초 제시됐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등 초과이익공유제의 세부항목들은 최종안에서 모두 제외됨

○ 2012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대기업 45곳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을 체결, 성과공유제가 확산되기 시작

- 협약에는 협력사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다양한 공동혁신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협력성과의 공유를 명시

- 또한 대기업들은 사내에 성과공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추진실적을 임직원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함

○ 지난 4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산업부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갖고 2,3차 협력중소기업까지 성과공유제 적용대상을 확대

- 2014년 11월 ‘제3차 동반성장기본계획’에서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로 채택된 ‘다자간 성과공유제’가 본격 도입된 것

- 이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 10개사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석

□ 아직 성과공유제 외 다른 공유자본주의 제도는 도입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변화의 조짐이 포착

○ KSS해운은 지난 3월 주총에서 대주주이자 창업주인 박종규 고문이 국내 최초로 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하여 실시하게 됨

- 박 고문은 임직원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조치로, 직원들의 업무몰입도 증가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힘

- SK하이닉스는 국내 최초로 ‘임금공유제’를 도입, 협력사와의 상생을 적극 도모
 - SK하이닉스 노사는 합의된 임금인상 재원 3.1%의 10%인 0.3%p를 내놓고, 회사가 0.3%를 매칭해서 총 0.6%를 협력사 직원에게 제공하기로 함
- 개별 기업 차원의 공유 자본주의 확산은 진행 중이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포용적 성장’ 정책은 최근에 와서야 주목받기 시작

□ 최근 국내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이 등장하기 시작

- OECD 회원국들과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제사회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 통계청 자료를 보완하여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7로 OECD에서 5번째로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¹⁸
 - 국민소득(NI)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89.6%에서 2010년 78.7%로 급락한 반면,
 -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비율인 수정 자본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에 10.4%에서 21.3%로 상승
- 2014년 7월 취임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
 -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의 세제개편을 시도
-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등의 목표를 계승하여 ‘포용적 성장’을 당의 경제정책 기조로 제시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 신산업전략, 일자리 복지를 제시하며 ‘저성장, 저고용, 저소득’ 위기에 대처할 것을 천명
 - 이처럼 정치권의 움직임은 내년 총선으로 시작되는 선거 시즌의 귀환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능성을 미리 예상케 함

18 통계청 자료에 의한 지니계수는 0.302이나, 통계청의 조사는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한편, OECD 평균은 0.314임. 자세한 내용은 김낙년(2013) 참조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 미국 대선이 있는 2016년에 한국에서도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포용적 성장'이 정치권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 ↑

-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내년 여름까지 공유 자본주의나 포용적 성장 등 소득불평등 관련 공약경쟁이 벌어질 전망
- 국내 시민사회도 소득불평등 이슈를 총선 국면에서 여론화할 전망
 - 롯데사태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의 경제민주화 운동을 추진한 바 있어, 총선을 앞두고 소득불평등 문제가 경제민주화로 연계될 가능성 큼
 - 총선정국에 들어서면 이런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여, 포용적 성장 이슈가 여야의 공약으로 다양하게 제시될 전망
- 특히 주목할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¹⁹⁾'의 재추진 가능성
 - 2013년 정기국회 이후 흐지부지된 상법 개정이 지난 여름의 롯데사태를 계기로 다시 경제민주화 이슈가 떠오르며 다시 주목
 - 과거 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상법개정공약만 이행됐어도 재벌 지배구조 변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²⁰⁾
 - 이는 상법개정이 주주권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잘 보여주는 발언

□ 한편, 11월 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채택된 2015년 APEC정상 선언문을 보면,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

- 이 선언문에서 APEC 정상들은 포용적 경제 구축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을 채택
 - 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은 이전의 '2010 APEC 성장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제도구축, 사회통합, 및 환경적 영향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19 상법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최충규 (2013.10월), "상법개정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내부보고서 참조

20 경향신문, "재벌개혁 열쇠는 '상법 개정'", 2015년 8월9일자

- 특히, 포용적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비대칭적 규제 완화 등의 실천을 다짐
 - 이는 APEC정상회의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을 의미
 - 이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정한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
- 포용적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서 거시적 정책뿐 아니라 미시적 산업정책으로 계속 구체화될 전망
 - 미시적 정책은 공유 자본주의와 연결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

[참고자료]

[보고서]

김낙년, “한국의 소득분배”, Working Paper 2013-06 낙성대경제연구소 (2013.2월)

관계부처 합동, “201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보도자료 (2015.4월)

최충규, “상법개정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포스코경영연구원, (2013.10월)

Era Dabla-Norris, et al, (June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

Freeman, R. B. Joseph R. Blasi, and Douglas L. Kruse, (2010) “Shared Capitalism at work”, NBER

Gregg, P.A. and Machin, S.J. (1988) “Unions and Incidence of Performance Linked Pay Schemes in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6, pp91-107

Kruse, D.L., (1996) “Why Do Firms Adopt Profit-Sharing and Employee Ownership Plan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 34. No. 4(December), pp515-38

Kruse, D.L., “Research Evidence on Prevalence and Effects of Employee Ownership”,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Employer-Employee Relations, Committee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February 13, 2002

Kruse, D.L., J.R. Balsi and R. Park, (August 2008) “Shared Capitalism in the US Economy?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Employee Views of Financial Participation in Enterprises”, NBER

Poole, M., (1999) The Origins of Economic Democracy: Profit Sharing and Employee-Shareholding Schemes, , London: Routledge

Samans, R., J. Blanke, G. Corrigan, M, Drzeniek, (2015)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915”, World Economic Forum

[언론]

경향신문, “재벌개혁 열쇠는 ‘상법 개정’”, 2015년 8월9일자

뉴시스, “[전문] 2015 마닐라 APEC 정상선언문”, 2015년 11월 19일자

Blasi, J.R., R.B. Freeman, and D.L. Kruse, (July 15, 2015) “Capitalism for the Rest of Us”, The New York Times